



2023.1.9.

국회미래연구원 | 국가미래전략 Insight | 61호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



국회미래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가미래전략 Insight

2023. 1. 9.

Vol. 61

ISSN 2733-8258

발행일 2023년 1월 9일

발행인 김현곤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
Tel 02-786-2190 Fax 02-786-3977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격주 1회 발행하는 단기 심층연구결과로서,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합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

국회미래연구원

요약

- I. 대한민국 미래전망의 목표와 방법론
- II. 현재까지 주요 트렌드와 그 추세
- III. 2050년 미래 전망: 정량적 접근
- IV. 성숙사회를 향한 미래 시나리오
- V. 2037년 중장기전략과 2027년 최우선 정책
- VI.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 국회미래연구원은 6대 분야별 2050년을 전망하고 중장기 전략과 정책을 제시

- 사회적 관계, 주거환경, 도약을 위한 교육, 경제의 성장세, 지역정부의 정치 역량, 미중 갈등과 남북대립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를 선별하고 2050년 전망
- 다양한 미래전망을 종합하고 2037년 중장기전략과 2027년 최우선정책을 제시해 한국의 대전환 목표와 단계적 실현 방법 도출
- 이 과정에 내외부 전문가 41명 참여, 현재까지 추세 분석, 전망 모델링을 통한 장기 예측, 예측의 결과를 놓고 우리사회에 필요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 논의

• 6대 분야별 선호미래, 중장기 전략, 최우선 정책의 주요 내용

- 관계영역에서 ‘자유롭고도 고립되지 않는 개인들의 사회’를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이를 위해 중장기전략으로 기본소득제, 5년 내 실현해야 할 정책으로 가족구성권, 차별금지법, 사회수당 확대, 탈시설 지원법 등을 제시
- 주거환경에서 ‘어디에 살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이를 위해 중장기전략으로 돌봄, 건강, 자연환경 보존중심으로 전환, 5년 내 실현해야 할 정책으로 소멸도시의 관리,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 등을 제시
- 교육영역에서 ‘어디서나 계층상승의 도전 기회 확대’를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중장기전략으로 사회분배의 형평성, 고용의 안정성 강화를, 5년 내 정책으로 지방대학 자율성 강화와 지역대학 중심의 직업훈련 체계 구축, 분산 사무실과 원격 근무 확대 등을 제시
- 경제영역에서 ‘사람, 자연, 기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시장경제’를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중장기전략으로 녹색기술의 혁신과 대중소기업의 독립적, 자율적 거래 관계, 5년 내 정책으로 탄소세 도입,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등 제시
- 정치영역에서 ‘다양한 지역사회의 공존과 발전을 위한 분권형 거버넌스’를 선호미래상으로, 중장기전략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역정부 주도, 지역 민주주의와 자율성 확대를, 5년 내 정책으로 지역 정당의 설립을 제시
- 국제관계에서 ‘역량과 신뢰 기반의 스마트파워 코리아’ ‘남북한이 상호 인정한 공존과 병립’이 선호미래상, 5년 내 정책으로 기술혁신에 기반한 외교 다변화, 탈북민, 재일조선인, 조선족, 이주노동자를 포괄해 한국 정착을 돕는 법제도 정비 등 제시

I. 대한민국 미래전망의 목표와 방법론

□ 미래 전망의 목표

- 대한민국의 규범적 미래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에 이르는 다양한 길을 전망
- 규범적 미래 목표는 국회미래연구원이 '21년 국민과 함께 도출한 선호미래상
- 선호미래상: **‘성장사회를 넘어 성숙사회로’**
- 성숙사회의 정의(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2021)
 - ‘국가 주도적 성장을 지양하고 개인이 자율적으로 성장을 기획하고 추구하는 사회’
 - ‘중앙집권적 거버넌스를 넘어 지역사회의 자율적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사회’
 -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를 돌보는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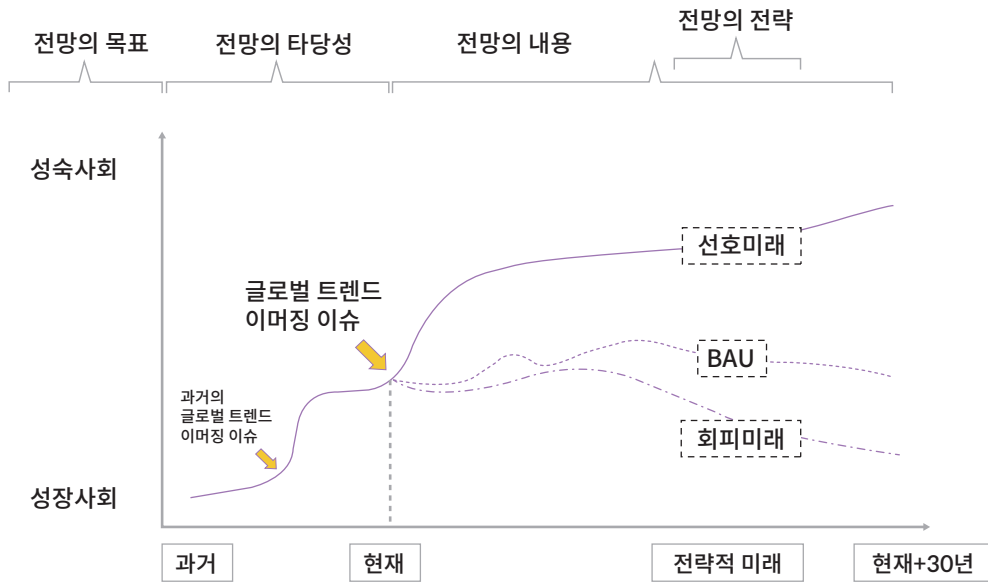
□ 미래 전망의 내용

- 현재 시점에서 예측할 수 있는 3가지 방향의 미래를 전망하고 제시
- BAU(Business As Usual, 이대로 간다면): 큰 변화 없이 **‘현재의 추세대로’** 맞이하는 미래
- 선호미래: 여러 노력을 기울여 맞이한 **‘바라는’** 미래(성숙사회 비전 실현)
- 회피미래: 변화에 대응 실패로 맞이한 **‘최악의’** 미래

□ 미래 전망 기반의 정책 도출(전략적 미래)

- 선호미래(성숙사회)를 실현하고, 회피미래에 대응하는 정책과 전략 도출
- 전략적 미래는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확인하고 선택한 미래를 뜻함
- 선호미래 실현과 회피미래 대응을 위한 정책과 전략은 15년 내 실현을 가정한 것으로 지금부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 [그림1]에서 전망의 목표로 **‘성숙사회’**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실현하는 데 고려해야 할 다양한 미래의 길을 전망(2050년)의 내용으로 표현했으며, 이러한 다양한 미래의 길에서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를 **‘선호미래’**, 대응해야 할 미래를 **‘회피미래’**, 변화 없이 맞이할 미래를 **‘BAU’**로 설명

[그림 1] 미래전망의 4대 구성요소와 연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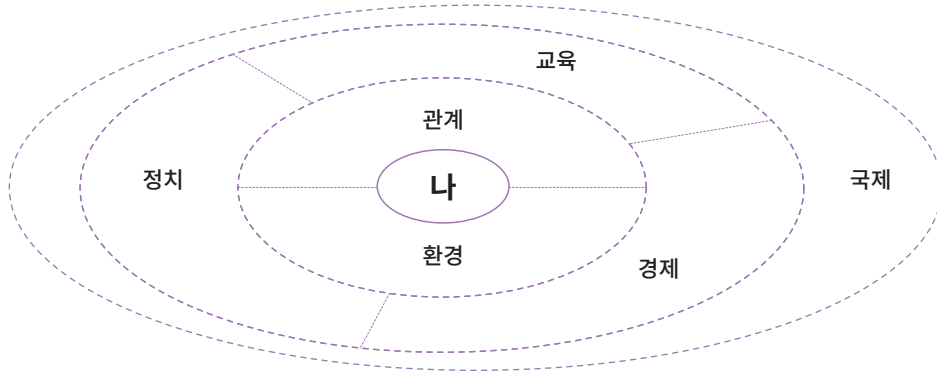
□ 6개 분야의 2050년 전망과 선호미래 전략 제시

- '22년 국회미래연구원은 「대한민국 미래전망」과제를 수행하면서, 미래를 관계, 환경, 교육, 경제, 정치, 국제 등 6대 분야로 나눠 제시하고 2050년 미래를 전망했음
- 내부 연구진의 논의를 통해 성숙사회를 실현하는 데 꼭 물어야 할 질문을 6대 분야별로 2개씩 총 12개를 제시하고 이에 답하는 연구를 추진(표1 참조)
- [그림2]에서 6대 분야의 중심에 '나'가 있으며, 각 개인(또는 조직)은 관계와 (거주)환경을 선택하고, 교육과 경제, 정치, 국제적 변화에 맞추거나 필요한 변화를 조금씩 창조하면서 생존하고 번영하려는 주체로 간주
- 국회미래연구원의 미래전망 연구는 6대 분야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 대한민국 시민이 스스로 미래를 기획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연구의 주요 방법론

- 국내 전문가 31명과 함께 6대 분야별로 현재까지 트렌드와 그 추세를 분석
-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망 모델을 개발해 2050년까지 3가지 다른 방향의 미래 예측
- 내외부 전문가 논의를 통해 미래전망 모델을 통해 도출한 3가지 미래의 내용을 분석하고 선호미래로 향하는 시나리오 제시
-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2037년 중장기 전략과 2027년 최우선 정책을 도출

[그림 2] 6대 미래전망 분야



<표 1> 미래전망에서 다룬 6대 분야별 핵심 질문 1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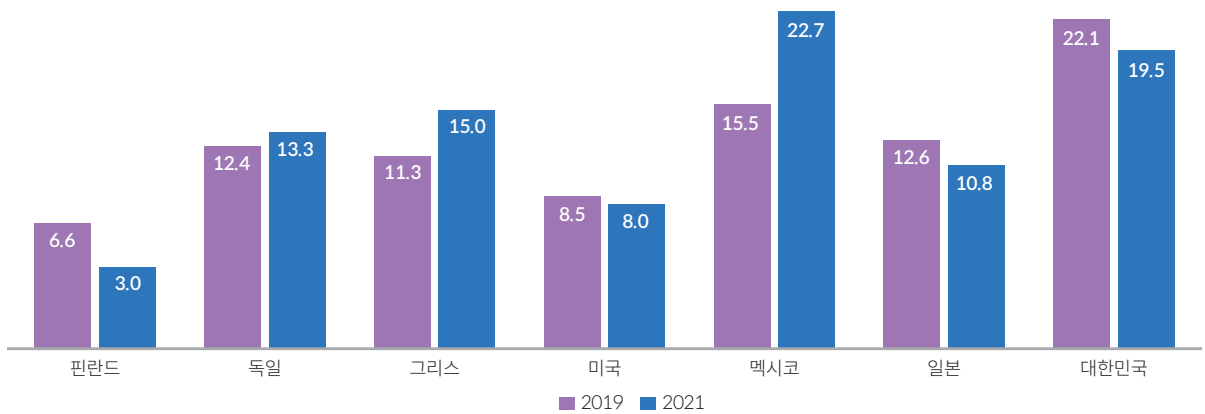
분야	2050년 미래 전망의 핵심 질문들
관계	우리는 경쟁하며 협력할까, 경쟁하며 고립될까?
	다양한 사람들의 사회 참여를 보장할 수 있을까?
환경	우리는 주거환경에 만족하며 살까?
	어느 지역에 거주해도 정신적, 신체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교육	노력하면 계층 상승할 수 있을까?
	어느 곳에서도 혁신을 위한 다양한 도전의 기회가 주어질까?
경제	한국 산업의 성장세를 지속해서 기대할 수 있을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성장 격차는 계속 벌어질까?
정치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높아질까?
	지방정부의 재정과 통치역량은 높아질까?
국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은 지속해서 확대될 것인가?
	우리는 공동번영의 한반도에서 살게 될까, 갈등과 격차가 심해진 한반도에서 살게 될까?

II. 현재까지 주요 트렌드와 그 추세

□ 관계: 경쟁과 협력의 조화

- 단기 성과주의와 시장경쟁에 집중한 결과 비정규직 비율, 남녀 임금 격차, 자살률, 산재 사망률,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
- 주요 지표 분석: 사회적 지지체계 OECD 최하 수준(그림3 참조), 여성 비정규직 비중은 높은 수준, 청년고용률 OECD와 비교해 낮은 수준, 반면 장애인 고용률은 소폭 상승
- 추세: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개인의 증가, 협력보다 갈등 심화

[그림 3] 팬데믹 전후 주요 선진국의 사회적 고립(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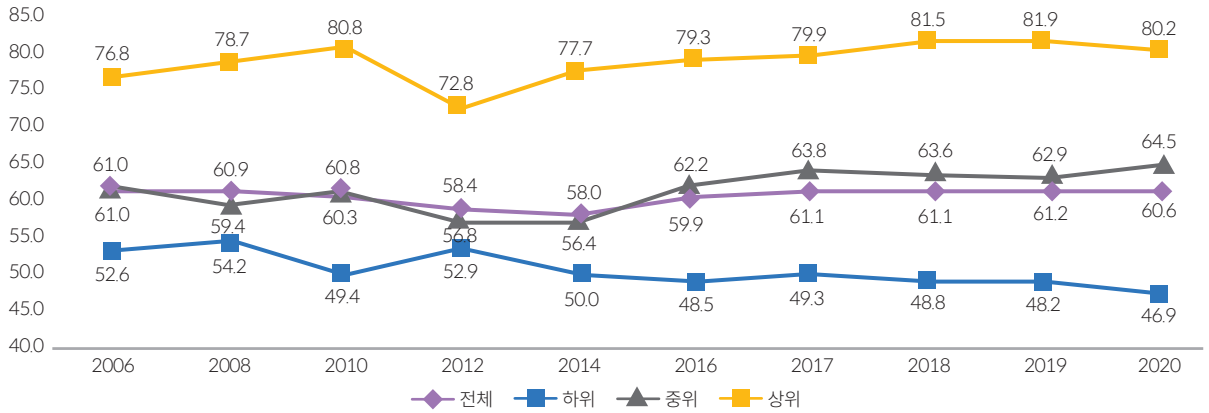


주: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나 친지 등 지지체계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를 고립으로 정의. 자료: OECD(2022), Social support (indicator) 자료를 이용해 작성(김성아, 2022)

□ 주거환경: 안전하고 건강한 삶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감소, 1인당 주거 면적 증가는 긍정적이지만, 소득 하위계층 자가보유율 감소(그림4),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가격 격차 심화는 부정적
- 주요 지표 분석: 폭염과 열대야 심화, 도시 열섬효과 심각, 1인당 공원면적 감소, 노인 대상 강력범죄율 상승, 친환경 차는 지속 증가
- 추세: 소득 하위계층과 소수 약자의 주거환경은 여러 위험에 취약

[그림 4] 소득별 자가보유율 추이(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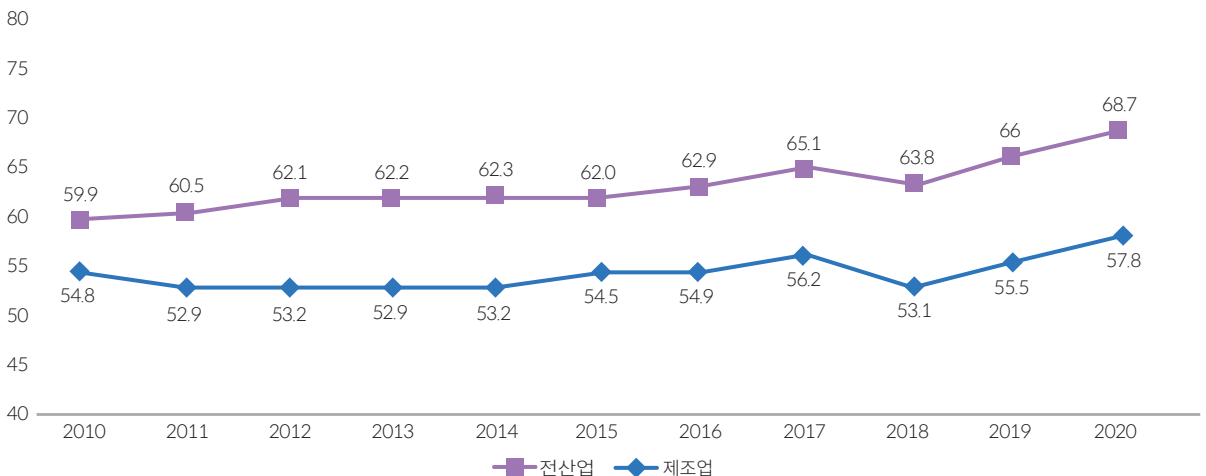


출처: 국토교통부(2021), 55쪽 그림 III-4 인용

□ 교육: 혁신을 위한 도전의 기회

- 시민들의 주관적 사회이동성 인식은 지속 하락, 하도급 기업의 원사업자 의존도 심화
- 주요 지표 분석: 임금 불평등 심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수행 약화, 제조업종의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50% 수준(그림5), 창업은 수도권에 집중, 평생학습 참여율은 증가
- 추세: 수도권 대기업 노동자와 지방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 격차 심화

[그림 5]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추세(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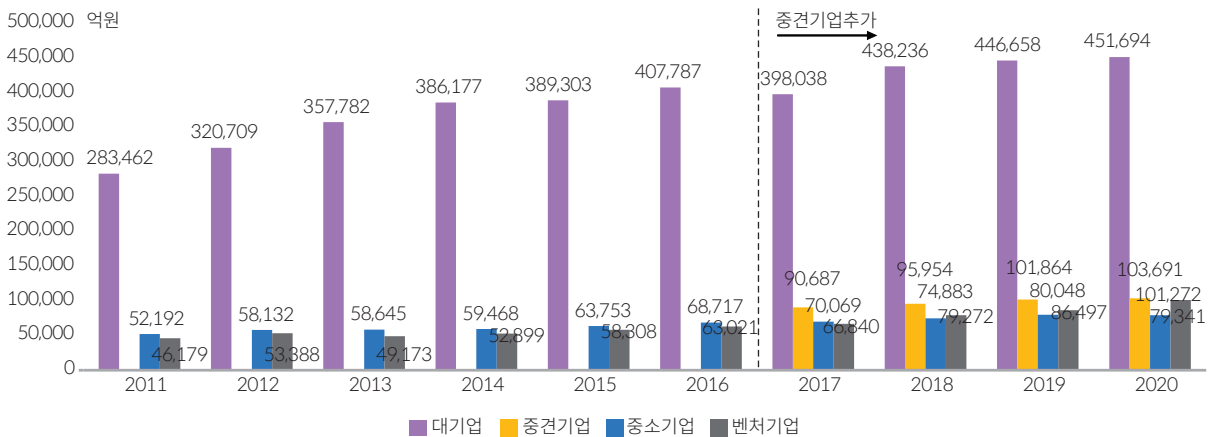


출처: 위평량, 2022

□ 경제: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세

- 미·중 대립의 격화, 세계화 주춤, 경제불평등 심화, 인구감소와 고령화, 기술의 인력 대체 강화 등 경제의 내외부 환경에 불안 가중
- 주요 지표 분석: 주요 국가와 비교해 한국의 신생기업 생존율은 낮은 수준, 산업별 연구개발비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운수, 정보통신,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의 증가, 기업별 연구개발비는 전체 기업 수의 0.5%에 불과한 대기업이 61.4% 차지(그림6), 수도권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전체의 69.2%, 4차산업혁명의 흐름에서 재택근무 증가
- 추세: 대기업과 수도권 기업 중심의 불균형 발전 심화

[그림 6] 우리나라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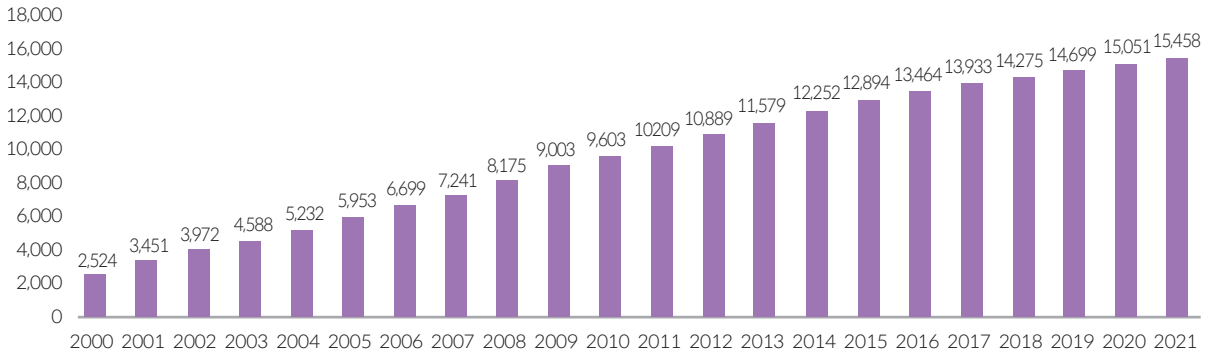
※ 2017년부터 기업유형별 구분에 중견기업이 포함되었으므로 시계열 분석시 주의를 요함(정민우, 2022)

※ 자료원: 각 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

□ 정치: 정부와 국회의 신뢰도

- 국회와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 탓에 집회와 시위, 온라인 의견제시 등 시민의 직접행동 증가, 환경보호, 양성평등, 정치와 경제의 의사결정 참여, 자기표현의 중시 강화
- 주요 지표 분석: 정부의 효과성 증가 추세지만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 행정 환경은 복잡,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 증가,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갈등 증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감소, 비영리민간단체 가입률 증가(그림7), 공공기관 청렴도 증가
- 추세: 제도권 정치의 불신 추세에서 국민의 직접적 의사표시와 행동 증가

[그림 7] 한국의 비영리민간단체 수 추이: 2000-2021년

출처: 행정안전부, 2022¹

□ 국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남북관계

- 경제, 기술, 외교, 가치 등에서 미국의 대중 견제 심화, 한국, 유럽, 일본, 아세안 등 중견그룹의 위상은 증대, 북핵 문제 해결은 회의적 시각
- 주요 지표 분석: 유럽연합과 경제, 안보, 위기관리 협정 강화,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꾸준히 증가, 기술과 문화 교류 증대를 통한 협력 기회 증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증가(표2), 북한의 교역 감소(일본과의 교역은 2006년 핵실험 이후, 한국과의 교역은 2010년 5.24조치 및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급감, 2017년 이후 90%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교역은 대북 제재 및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소)
- 추세: 국력에 기반한 한국의 경제적, 기술적, 규범적 리더십 발휘 공간 확대되나,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남북관계 불안정성 속에서 대내외적 도전이 예상, 이 때문에 국력 지속 상승과 평화안정 위협 가능

<표 2> 북한 핵무기 수량 (2012~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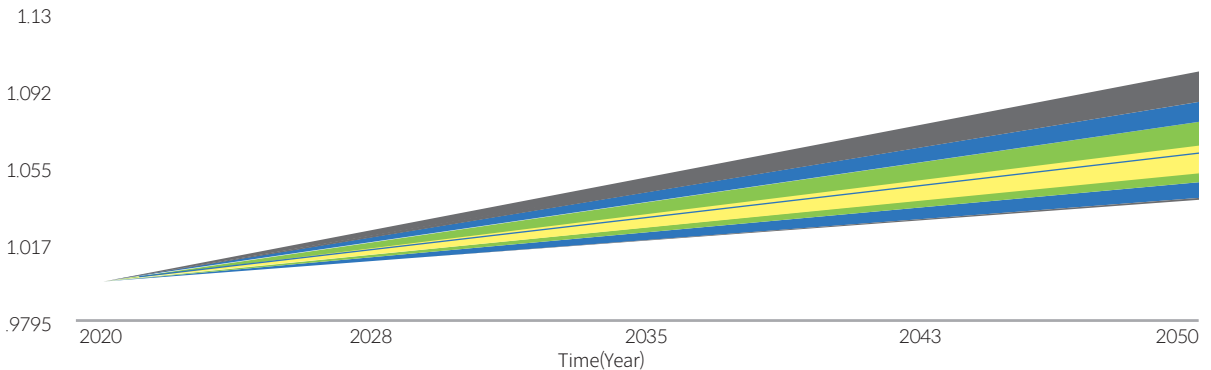
년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량	?	6-8?	6-8	(10)	(10-20)	(10-20)	(20-30)	(30-40)	(40-50)	(40-50)	20

출처: SIPRI YearBook

1 <https://www.index.go.kr> (2022년9월25일 검색)

- 미래전망변수는 6대 분야별 미래질문 12개에 대한 예측 결과를 제공하는 변수, 그림8에서 빨간색으로 표기함(예: 취약계층 경제활동 참여도, 사회적 고립도)
- 미래정책변수를 난수 시뮬레이션하면 2050년까지 분야별 미래전망변수의 변화 추이 확인, 이를 통해 최선과 최악의 미래뿐 아니라 이 미래를 형성하는 미래정책변수 조합도 확인
- [그림9]는 관계분야의 미래질문 ‘우리는 경쟁하면서 협력할까, 고립될까?’를 전망하면서 ‘사회적 고립도’의 미래를 2050년까지 시뮬레이션한 결과로 노란색 영역이 ‘**이대로 가면 맞이할 미래**’를 뜻하며, 노란색 영역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양극단이 선호미래와 회피미래를 의미함(양극단의 회색 영역)

[그림 9] 사회적 고립도의 정책변수 난수 시뮬레이션 결과



범례: Y축의 숫자는 미래정책변수들을 2020년 시점에서 모두 1로 놓고 2050년까지 BAU, 선호미래, 회피미래별로 그 변화 추이를 나타냄. 자세한 설명은 <표 3>을 참조

-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한 ‘**이대로 가면 맞이할 미래**’ ‘**선호미래**’ ‘**회피미래**’ 영역을 미래정책 변수의 조합으로 역산하면 미래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을 예측할 수 있음
- <표3>은 사회적 고립도를 전망하면서 정책변수들의 영향력을 계산한 것으로, 선호미래(사회적 고립도의 약화)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크기순으로 정책변수1, 4, 3으로 나타난 반면, 회피미래(사회적 고립도 증가)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책변수3, 4, 1순으로 나타남
 - <표3>에서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BAU 대비 선호미래와 회피미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크기 변화이며, 예를 들어 정책변수1은 BAU 대비 22.89%만큼 상승해 선호미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냄
- 이를 통해 선호미래와 회피미래에 영향을 주는 미래정책변수와 주요 미래정책변수의 조건이 **BAU(“지금 이대로 가면”)** 시나리오 대비 어떻게 변화하는 역으로 유추

<표 3> 사회적 고립도의 미래전망에서 정책변수들의 난수 시뮬레이션 결과

미래 \ 정책변수	정책변수1	정책변수2	정책변수3	정책변수4	정책변수5
선호미래	1.2288	1.0720	1.2163	1.2283	1.1046
회피미래	0.9053	0.9628	0.8418	0.8959	0.9865
BAU	1	1	1	1	1
선호/BAU	22.89%	7.21%	21.63%	22.83%	10.46%
회피/BAU	-9.47%	-3.81%	-15.81%	-10.40%	-1.34%

정책변수1: 비혈연관계 기반의 사회적 연대 / 정책변수2: 사회협약을 통한 구조적 차별 해소 / 정책변수3: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사회 서비스 혁신 / 정책변수4: 지역단위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 / 정책변수5: 취약 계층 고용 및 사회안전망 구축

□ 2050년 관계의 미래 시뮬레이션³

-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사회가 되려면 **‘비혈연 기반의 사회적 연대’와 ‘인구 및 가구 구조 변화를 고려한 사회서비스 혁신’, ‘지역 단위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 등의 정책을 실현해야 함
 - 반면, ‘인구와 가구 구조의 변화를 고려한 사회서비스 혁신’을 실현하지 못하면 경쟁하면서 많은 사람이 고립되는 회피미래를 맞이함
 - 정책적 시사점: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을 돌보는 돌봄 노동자와 보건의료시설 확충, 특수교육의 기회와 문화시설 확대 등이 더욱 필요할 전망
- 사회가 다양성을 포용하고 통합하려면 **‘사회협약을 통한 구조적 차별 해소’, ‘취약계층 대상 고용 및 사회안전망 구축’**의 정책을 실현해야 함
 - 반면, ‘사회협약을 통한 구조적 차별 해소’를 실현하지 못하면 회피미래가 도래할 가능성이 큼
 - 정책적 시사점: 정부가 다양한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거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담은 사회협약을 체결하거나, 치안과 사회보험, 자살 예방, 산업재해 예방, 돌봄 시설, 웰다잉, 사회적 부양 등과 관련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함

□ 2050년 환경의 미래 시뮬레이션

- 주거환경에 만족하는 사회가 되려면 **‘돌봄·보육·의료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확충’,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 ‘주거비용 보조’** 등의 정책을 실현해야 함
 - 반면, ‘주택 공급방식 다양화’, ‘부동산 및 주택 정책 안정성’ 등을 실현하지 못하면 회피미래를 맞이할 수 있음
 - 정책적 시사점: 사회보험체계의 변화(가족과 임금 기반에서 개인과 소득 기반으로 전환), 기후변화와 에너지

3 6대 분야 전망에 필요한 지표의 현재까지 추이와 미래 시뮬레이션의 자세한 과정 및 결과는 박성원 외. (2022). 대한민국 미래전망 연구. 국 회미래연구원 참조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주택 설계, 공공임대주택과 월세 등 주거비 보조를 시행할 필요

2. 어디서든 정신적, 신체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려면 **‘돌봄·보육·의료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확충,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정책 실현 필요

- 반면,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혁신’과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등을 실현하지 못하면 회피미래를 맞이할 수 있음
- 정책적 시사점: 주거환경의 안정성을 높이려면 사회복지, 보건의료, 자연환경의 미래이슈와 문제를 긴밀히 연계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함

□ 2050년 교육의 미래 시뮬레이션

1. 노력하면 계층 상승하는 사회가 되려면 **‘노력에 대한 공정한 처우 기대,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 ‘고용관계 안정성, ‘사회분배 공정성 및 형평성’** 정책을 실현해야 함

- 반면, ‘노력에 대한 공정한 처우 기대, ‘절차 및 정보 공정성’을 실현하지 못하면 회피미래를 맞이할 가능성 있음
- 정책적 시사점: 기회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것보다 학력이나 성별 등에 따른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이는 결과적 공정성을 강조할 필요

2. 혁신을 위한 다양한 도전의 기회가 있는 사회가 되려면 **‘학습 및 직업훈련 자율성과 재량 수준 향상, ‘일터 혁신, ‘보상체계 혁신’** 등의 정책을 실현해야 함

- 반면, ‘계층 및 서열화 수준 확대, ‘노동자의 학습 접근성 저하, ‘일터 혁신의 실패’ 등은 회피미래의 도래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
- 정책적 시사점: 지역 산업과 지역 인재 간 선순환 학습체계를 도모하도록 지방대학의 자율적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대학 중심의 직업훈련과 학습체계 구축이 필요

□ 2050년 경제의 미래 시뮬레이션

1. 한국 산업의 성장세를 지속하려면 **‘R&D 효과성, ‘기업 간 네트워킹 지원, ‘조직 내 생산성 제고 혁신, ‘인적자원의 질’**에서 도약을 일궈야 함

- 반면, ‘기업 간 네트워킹 지원, ‘조직 내 생산성 제고 혁신, ‘인적자원의 질’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회피미래를 맞이할 수 있음
- 정책적 시사점
 - R&D 이후 표준, 인증, 특허, 실증, 금융, 세제, 초기 시장 조성 등 패키지 형태의 기업지원이 필요
 - 취업과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해 개인의 역량 강화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다시 복지 재원의 확보로 선순환되도록 유도
 - 서비스업의 저조한 생산성을 제고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고 비교역재 부문의 성장과 내수 확대,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 격차를 줄이려면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개선’, ‘대기업 중소기업 거래관계 통제력 약화’, ‘중소기업 자금 조달 역량’, ‘중소기업 전략적 제품 다각화’** 등의 정책을 실현해야 함

- 반면, ‘대중소 기업의 시장 지배력 격차’, ‘대기업 중소기업 거래관계 통제력 강화’ 등은 회피미래의 도래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
- 정책적 시사점
 - 중소기업 스스로 규제개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시혜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적 상생 관계로 나아가도록 지원
 -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혁신형 강소기업 중심의 수평적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
 - 자원배분 시장의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 혁신형 창업, 중소, 중견기업이 경영과 금융, 인적자원을 제때 조달할 수 있도록 생산요소시장의 개선

□ **2050년 정치의 미래 시뮬레이션**

1.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지려면 **‘국회 국정기획 기능’, ‘정당 정책 다양성’, ‘정책 품질 제고’** 등의 노력을 실현해야 함

- 반면, ‘국회 소통 계수’, ‘국회 사회갈등 해소 노력’, ‘정치문화 건전성’ 등에서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 국회는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회피미래가 도래함
- 정책적 시사점
 - 국회가 갈등의 조정과 사회통합, 미래기획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구현, 국정기획 능력과 갈등 조정 역량을 발휘
 - 정당 간 이견과 차이를 조정하고 합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제3정당과 지방 정당이 출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교섭단체의 의석 규모를 현행 20석에서 점차 줄여나가고 정당 정책위 소속의 국회 전문위원의 규모를 확대해 국회의 위원회 기능을 강화

2. 지방정부의 재정과 통치역량을 높이려면 **‘지방재정 민주주의 실현’, ‘중앙과 지방재정 관계 개편 합의 수준’, ‘지방정부의 행정기획 역량’**이 획기적으로 높아져야 함

- 반면, ‘지방재정 민주주의 실현’, ‘중앙과 지방재정 관계 개편 합의 수준’이 낮아지면 회피미래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
- 정책적 시사점
 -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체계의 구축, 지방정부 간 협력사업 개발과 상생의 발전을 도모
 - 지방정부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세출분권과 세입분권을 모두 강화할 필요
 - 미래의 문제를 앞서 예상하고 대비하는 예견적 지방자치 거버넌스도 구축해야 함

□ 2050년 국제질서 미래 시뮬레이션

1.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확대하려면 **‘혁신역량 강화’ ‘외교 다변화’, ‘과학기술 외교 효과성’** 등을 높여야 함
 - 반면, ‘기술혁신 경쟁력 저하에 따른 경제역량 쇠퇴’와 ‘국제관계 불확실성’이 심화할 경우, 회피미래 도래
 - 정책적 시사점
 -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등 하드파워와 문화력, 리더십 등 소프트파워를 결합해 글로벌 지지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스마트파워 전략 추진
 - 글로벌 디지털 혁신 경쟁에서 한국은 기술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외교자산으로 적극 활용해 과학기술 외교를 확대
 - 중견국, 지역기부, 지역다자, 제3세계 등 개발도상국 외교로 외교 다변화를 추진,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
 - 가치규범적 측면과 안보적 이해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을 병행
2. 한반도의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 ‘비핵화 평화체제의 효과성’, ‘한반도 평화구축 노력의 일관성’**을 강화하거나 높일 정책 제시
 - 반면, ‘대중교역이 안정화’될수록, ‘북한체제 안정성’이 강화될수록 남북한이 협력하며 공동번영을 이룰 가능성은 낮아짐
 - 정책적 시사점
 -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같은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국제적 협력과 함께 남북한의 인구학적 변화 등 미래 한반도 환경과 관련해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다양한 평화·통일에 관한 담론 및 실천을 지속
 - 비핵화-한반도 평화체제 확립 목표를 지향하면서 남북한이 상호 군사적 위협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신뢰구축에 기반한 평화의 제도화를 통해 한반도형 공동안보를 진전시켜야 함

□ 소결: 6대 분야별 미래 영향력이 높은 정책변수들

- 앞서 6대 분야별로 선호미래와 회피미래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표4>에서 정리하고 제시함
- 예를 들어, 관계분야에서 미래질문은 경쟁력과 협력의 조화였고, 이 미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변수로 **‘비혈연 기반의 사회적 연대’** 등을 제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변수로 **‘인구와 가구 구조의 변화를 고려한 사회서비스 혁신의 실패’** 등 제시

<표 4> 6대 영역별 미래 영향력이 높은 정책 변수

영역	미래 질문	긍정적 영향 강화 정책 변수	부정적 영향 강화 정책 변수
관계	경쟁과 협력	-비혈연 기반의 사회적 연대 -인구 및 가구 구조 변화를 고려한 사회서비스 혁신 -지역 단위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	-인구와 가구 구조의 변화를 고려한 사회서비스 혁신의 실패
	포용과 통합	-사회협약을 통한 구조적 차별 해소 -취약계층 대상 고용 및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협약을 통한 구조적 차별 해소의 실패
환경	주거 만족	-돌봄·보육·의료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확충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 -주거 비용 보조	-주택 공급방식 획일화 -부동산 및 주택 정책 불안정
	안정된 삶	-돌봄·보육·의료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확충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	-공공보건 의료체계의 후퇴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에 실패
교육	계층상승	-노력에 대한 공정한 처우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 -고용관계 안정성 -사회분배 공정성 및 형평성	-노력에 대한 공정한 처우 기대 쇠퇴 -절차 및 정보 공정성 후퇴
	혁신의 기회	-학습 및 직업훈련 자율성과 재량 수준 향상 -일터 혁신과 보상체계 혁신	-계층 및 서열화 수준 확대 -노동자의 학습 접근성 저하 -일터 혁신의 실패
경제	성장세 지속	-R&D 효과성 -기업 간 네트워크 지원 -조직 내 생산성 제고 혁신 -인적자원의 질 향상	-기업 간 네트워크 지원 퇴조 -조직 내 생산성 제고 부진 -인적자원의 질 저하
	대중소기업 성장 격차 완화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개선 -대기업 중소기업 거래관계 통제력 약화 -중소기업 자금 조달 역량 -중소기업 전략적 제품 다각화	-대중소 기업의 시장 지배력 격차 -대기업의 중소기업 거래관계 통제력 강화
정치	국회 신뢰도	-국회 국정기획 기능 -정당 정책 다양성 -정책 품질 제고	-국회 소통 계수 저하 -국회 사회갈등 해소 부진 -정치문화 건전성 후퇴
	지자체 역량	-지방재정 민주주의 실현도 -중앙과 지방재정 관계 개편 합의 수준 -지방정부의 행정기획 역량	-지방재정 민주주의 미 실현 -중앙과 지방재정 관계 개편 합의 불성립
국제	한국의 위상	-기술혁신역량 강화 -외교 다변화 -과학기술 외교의 효과성	-기술혁신역량 저하 -국제관계 불확실성 확대
	남북 협력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 -비핵화 평화체제의 효과성 -한반도 평화구축의 일관성	-북한체제 지속성 강화 -대중교역의 안정화

IV. 성숙사회를 향한 미래 시나리오

□ 2050년 관계 시나리오

- 혼자 사는 사람의 증가, 함께 사는 사람들은 친족에서 비친족으로 대체
- 가족관계와 사회관계(결사체 참여)가 동시에 해체되는 추세 강화
- 혈연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친밀성의 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는 가족구성권이 도입된다면 우리사회에 전통적 가족을 대체하는 새로운 관계가 등장할 수 있음
- 다만, 비혈연관계의 증가가 한국사회의 관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는 면밀하게 추적할 필요
- 이와 함께, 전망 모델링을 통해 도출한 변수들, 예를 들면 사회단체참여율, 정치적 역량감, 대인신뢰도가 우리사회의 관계 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지속해서 살펴봐야 함

□ 2050년 환경 시나리오

- 자가주택 보유율 정체, 주거비용 상승, 주택 및 주거 만족도는 지속 하락
- 의료와 녹지, 생태, 복지 등의 개선을 전제로 주거환경의 정서적, 신체적 안정도는 상승 여지 높음
-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혁신이 핵심 변수, 자연환경과 질병의 위협에 대응하는 정책이 중요함을 시사
-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간 격차, 기후위기 대응, 삶의 질을 높이는 정주 환경 조성이 핵심 미래 과제임을 확인
- 이와 함께, 교통환경의 변화(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 등), 기술을 통한 주거의 공간 변화(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등)도 면밀히 살펴야 함
- 인구감소, 소멸도시 확산, 가족 구성 변화와 사회적 교류는 주거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향후 ‘관계’와 ‘환경’의 복합적 변화를 전망해야 함

□ 2050년 교육 시나리오

-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 및 계층상승 기대감은 지속해서 급락
- 이는 낙관적 경제성장 전망, 고용관계 안전성 증진, 노력에 비례하는 공정한 처우가 이뤄져도 사회적 이동 및 계층상승 기대감은 지속 하락
- 일과 삶의 균형은 미미하게 개선, 개인에게 도전과 혁신의 기회가 지금보다 더 많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 보상체계의 혁신, 일터 혁신, 학습 및 직업훈련 자율성, 높은 학습 접근성의 보장으로 사회의 혁신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인공지능의 인간 일 대체, 자동화, 기계를 통한 생산성 혁신 등의 변화는 교육의 미래를 전망할 때 중요한 변수여서 지속해서 관찰해야 함

□ 2050년 경제 시나리오

- 우리나라 산업의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
- 한국의 산업이 지속 성장하려면 극복해야 할 문제는 기술혁신, 생산인구의 감소, 환경 및 에너지 전환 등임
- 생산인구는 2050년까지 지속 감소해 산업의 성장세를 약화하나, 기술의 인력 대체 정도와 수준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
- 특히, 기술혁신은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윤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지만 인간과 기계, 인간과 인간의 소통을 향상할 수 있는 양날의 칼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지속해서 확대, 사회불평등의 핵심인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는 개선되기 어려움을 암시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노동생산성, 1인당 연구개발비에서 격차 심화
- 대중소기업의 격차를 완화하려면 정부는 무작정 연구개발비를 확대하기보다 기업별 맞춤형 연구개발비를 지원해야 함
-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업무환경 개선, 자기 발전의 기회 확대 등 고용환경의 개선도 대중소기업의 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
- 정부와 기업이 지속해서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따른 규제들이 산업의 성장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지속해서 파악해야 함
- 대중소기업의 격차는 고용, 노동, 관계(결혼 출산 등), 교육 시스템과 연계해서 전망할 필요

□ 2050년 정치 시나리오

- 국회의 대국민 신뢰도는 지속해서 하락, 주요 변수로는 국회의 낮은 갈등해소 및 정책 능력, 대국민 소통 능력, 정당의 양극화 등
- 경제불평등의 심화에 대응하는 공적 기관의 대응능력 약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국회와 정부의 신뢰도 하락

- 국회가 신뢰도를 높이려면 국정기획의 기능 강화, 정당 정책의 다양성, 정책 품질 향상에 노력해야 함
- 지방정부의 행정 능력은 지속해서 향상, 수요자 맞춤형 공공서비스 개편 및 행정기획 역량, 지역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등에서 향상을 기대
-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등도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에 긍정적 영향
- 지방분권이 강화되려면 지방정부의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의 정치가 강화되어야 함

□ 2050년 국제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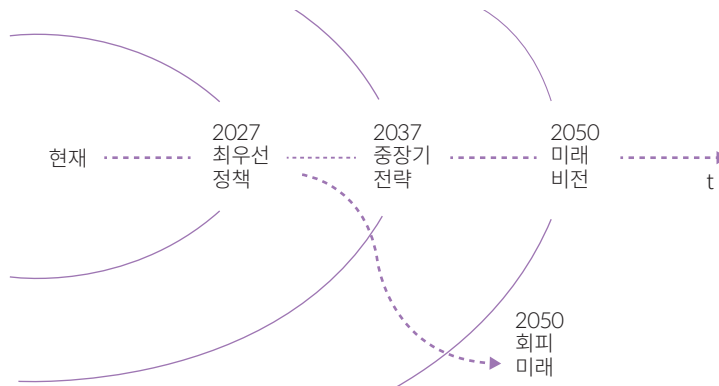
- 문화력과 외교력, 규범주도력,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의 경쟁력 제고 등으로 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를 종합한 국력의 상승 전망
- 진영화 질서, 탈세계화의 흐름은 생존과 번영에 복잡한 전략을 요구, 반면, 개발도상국의 부상, 다극질서의 등장, 비서구 질서의 도래는 한국에 기회 요인
-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결합한 스마트파워를 키우려면 지식과 정보역량, 혁신 능력, 창조와 영감을 발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
- 남북한 공동번영의 가능성은 지속해서 하락, 주요 변수로는 북한의 대중교역 안정성, 북한체제 지속성 등이 확인됨
- 특히, 북한이 중국과의 교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대중교역 안정성이 강화되면 남북관계 개선 유인은 작아질 수밖에 없음
- 반면, 남한의 북한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핵화 평화체제의 효과성, 한반도 평화구축 노력의 일관성 등은 한반도 공동번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가능성은 낮은 수준
- 한반도의 공동번영을 상호 분립과 격차를 전제한 각각의 발전으로 해석하거나 남북한 경계를 벗어난 **‘제3의 지대’**에서 교류 및 공동번영을 실험하는 시도(ex. 거레말큰사전편찬사업, 재영 남북코리안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반영한다면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상상할 수도 있음

V. 2037년 중장기 전략과 2027년 최우선 정책

□ 중장기 전략과 최우선 정책의 도출 과정

- 2050년 선호미래 실현과 회피미래 대응을 위한 2037년 중장기 전략과 2027년 최우선 정책을 도출
- [그림10]은 미래비전을 실현할 중장기전략과 최우선정책을 백캐스팅(backcasting) 접근법으로 표현
- 2037년 중장기전략은 2050년 미래비전을 실현할 조건이며, 중장기전략을 추진하려면 2027년 최우선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함
- 2027년까지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중장기전략과 비전 실현에 도움이 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그림10에서 나타낸 것처럼 회피미래를 맞이할 수 있음

[그림 10] 2050년 미래비전의 길과 회피미래의 길



-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은 현재까지의 트렌드와 추세, 2050년 미래전망 시뮬레이션과 미래 시나리오 전개를 고려하면서 2037년 중장기전략과 2027년 최우선 정책을 제시
- 연구진이 여러 차례 논의와 미래 전망 워크숍을 통해 전략과 정책을 토론하고 큰 방향에서 우리사회가 어떤 미래를 창조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논의(표5 참조)

<표 5> 6대 분야별 선호미래와 회피미래의 구체적 모습

분야	2050년 선호미래	2050년 회피미래
관계	-자유롭고도 고립되지 않는 개인들의 사회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사회	-이윤을 기준으로 인간을 상품으로 보는 관계 -서로 억압하고 배제하는 사회

분야	2050년 선호미래	2050년 회피미래
환경	-어디에 살든 안전하고 건강한 삶 -주거 걱정이 없는 사회	-서울과 비서울로 나뉘어 안전과 건강에서 양극화가 심화한 사회
교육	-어디서나 계층상승의 도전 기회 확대 -혁신적 시도를 장려하는 사회	-사회의 위계화, 서열화 심화
경제	-사람, 자연, 기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시장경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대중소기업의 격차 확대 -사람이 소외되는 시장 -기술에 사람이 종속되고 자연 파괴
정치	-역량 있는 지방 시대 -다양한 지역사회가 공존하는 분권형 균형발전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국제	-역량과 신뢰 기반의 스마트파워 코리아 -남북한 상호인정에 바탕한 공존, 남북한 경계를 넘는 상위 공동체(한반도) 지향	-경제역량 쇠퇴와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흔들리는 취약 국가 -핵전쟁, 혹은 남북한의 소통 피로도가 극단적으로 고조

□ 6대 분야별 중장기 전략과 최우선 정책

○ 관계 분야 2037년 전략, 2027년 정책

- 2037년까지 기본소득제 실시로 보편복지를 추진하고, 개인들이 만나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대폭 확대해야 함
- 2027년까지 가족구성권 인정, 차별금지법 시행, 사회수당의 확대, 탈시설 지원법 제정이 필요함
- 사회단체참여율이나 정치적 역량감,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적극 추진

○ 환경 분야 2037년 전략, 2027년 정책

- 2037년까지 소비도시에서 돌봄과 건강 도시로 전환하고, 개발에서 보존중심으로 도시정책을 전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함
- 2027년까지 인구감소와 소멸도시의 관리, 부동산 및 주택 정책의 안정성, 지역 간 인프라 격차의 완화가 필요함
- 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차 등 교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메타버스나 디지털 트윈 등의 기술을 통한 주거환경의 변화에도 주목해야 함

○ 교육 분야 2037년 전략, 2027년 정책

- 2037년까지 사회분배의 형평성 확대, 고용의 안정성 강화, 다양한 배움의 기회 확대가 필요함
- 2027년까지 지방대학의 자율성 강화, 지역대학 중심으로 직업훈련 체계 구축, 일터 혁신과 학습 인프라 혁신, 분산 사무실의 확산을 일궈내야 함
- 인공지능의 발전, 일상과 일터의 자동화 추세가 교육과 고용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주시할 필요

○ 경제 분야 2037년 전략, 2027년 정책

- 2037년까지 독립적, 자율적 대중소기업의 거래관계가 형성되고, 녹색기술의 혁신과 생산인구의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미래가 도래해야 함

- 2027년까지 납품단가 연동제의 정착(악용방지, 실효성 확보 등 추가 제도 개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탄소세 도입과 녹색산업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가속화 함
- 장시간노동관행 개선, 업무환경의 개선, 자기발전의 기회 확대 등 고용환경의 혁신 필요
- 정치 분야 2037년 전략, 2027년 정책
 - 2037년까지 지역 민주주의와 자율성 지자체 확대하고,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역정부 주도로 전환이 이뤄져 지역별 다양성이 확대되어야 함
 - 2027년까지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을 해소하고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당법 개정
 - 국회는 국정기획의 강화, 정당 정책의 다양화, 정책의 품질 제고에 노력해야 함
- 국제 분야 2037년 전략, 2027년 정책
 - 2037년까지 기술혁신과 규범으로 주도하는 외교 다변화를 이룩하고, 남북한 이분법적 단위가 아닌 다수의 하위 정치단위(ex. 도)들의 연합적 질서, 지역 시민사회 영역을 포괄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2027년까지 기술혁신에 기반한 외교 다변화, 탈북, 재일조선인, 조선족, 이주노동자 등을 따지지 않고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함
 - 지식과 정보역량 강화, 혁신 능력 배양, 창조적 영감을 발휘하는 사회 분위기 필요

<표 6>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2037년 중장기 전략과 2027년 최우선 정책

분야	2027년 최우선 정책	2037년 중장기 전략
관계	-가족구성권의 인정 -차별금지법 시행 -사회수당의 확대 -탈시설 지원법 제정	-기본소득제 실시로 보편복지 추진 -개인들이 만나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와 기회 확대
환경	-인구감소와 소멸도시의 관리 -지역간 인프라 격차 해소 -부동산 및 주택 정책의 안정성	-돌봄과 건강 도시로 전환 -개발중심에서 보존중심으로 도시정책 전환 -기후변화 적극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교육	-지방대학 자율성 강화, 지역대학 중심의 직업훈련 체계 구축 -일터 혁신, 분산 사무실, 원격 근무 확산	-사회분배의 형평성 확대 -고용의 안정성 강화
경제	-납품단가 연동제(악용방지, 실효성 확보 및 개선 등)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탄소세 도입과 녹색산업으로 전환	-독립적, 자율적 대중소기업의 거래관계 -녹색기술의 혁신
정치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을 해소 및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당법 개정	-지역 민주주의와 지자체 자율성 강화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별 다양성 확대
국제	-기술혁신에 기반한 외교 다변화 -탈북민, 재일조선인, 조선족, 이주노동자 등을 포괄하는 한국사회 정착, 통합을 위한 법제도 정비	-기술혁신, 규범주도로 글로벌 리더십 강화 -남북한 이분법적 단위가 아닌 다수의 하위 정치단위(ex. 도)들의 연합적 질서, 지역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거버넌스 구축

□ **6대 분야 공통 과제: 탈집중화, 함께 성장, 돌봄사회의 실현**

- 탈집중화: 환경과 정치, 남북관계에서 탈집중화, 탈중양화는 지역사회의 자생적 발전, 에너지 전환, 환경보존에 필요
- 함께 성장: 교육과 경제에서 대중소기업의 함께 성장, 사회적 약자와 강자의 함께 성장, 도시와 농촌의 함께 성장이 필요
- 돌봄사회: 관계와 교육에서 다양한 협력의 파트너 찾기, 사회적 고립도의 증가, 외로운 개인의 증가 등으로 필요

VI. 시사점 및 결론

□ 2050년 미래전망에서 BAU, 선호미래, 회피미래 예측

- 선호미래로서 ‘성숙사회’의 실현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변수를 가정하고 이를 전망 모델링을 통해 변수들의 영향력과 조합을 추출
- 6대 분야별로 선호미래와 회피미래를 형성하는 정책변수 도출, 이를 통해 우리사회가 추진해야 할 중장기전략과 최우선정책을 제안
- 이 과정에 내외부 전문가 41명 참여, 현재까지 추세 분석, 전망 모델링을 통한 장기 예측, 예측의 결과를 놓고 우리사회에 필요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 논의
- 미래전망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그룹은 <표 7>과 <표 8>을 참조

□ 6대 분야별 선호미래, 중장기 전략, 최우선 정책의 주요 내용

- 관계영역에서 ‘자유롭고도 고립되지 않는 개인들의 사회’를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이를 위해 중장기전략으로 기본소득제, 5년 내 실현해야 할 정책으로 가족구성권, 차별금지법, 사회수당 확대, 탈시설 지원법 등을 제시
- 주거환경에서 ‘어디에 살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이를 위해 중장기 전략으로 돌봄, 건강, 자연환경 보존중심으로 전환, 5년 내 실현해야 할 정책으로 소멸도시의 관리,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 등을 제시
- 교육영역에서 ‘어디서나 계층상승의 도전 기회 확대’를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중장기전략으로 사회분배의 형평성, 고용의 안정성 강화를, 5년 내 정책으로 지방대학 자율성 강화와 지역대학 중심의 직업훈련 체계 구축, 분산 사무실과 원격 근무 확대 등을 제시
- 경제영역에서 ‘사람, 자연, 기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시장경제’를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중장기전략으로 녹색기술의 혁신과 대중소기업의 독립적, 자율적 거래 관계, 5년 내 정책으로 탄소세 도입,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등 제시
- 정치영역에서 ‘다양한 지역사회의 공존과 발전을 위한 분권형 거버넌스’를 선호미래상으로, 중장기전략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역정부 주도, 지역 민주주의와 자율성 확대를, 5년 내 정책으로 지역 정당의 설립을 제시
- 국제관계에서 ‘역량과 신뢰 기반의 스마트파워 코리아’ ‘남북한이 상호 인정한 공존과 병립’이 선호미래상, 5년 내 정책으로 기술혁신에 기반한 외교 다변화, 탈북민, 재일조선인, 조선족, 이주노동자를 포괄해 한국 정착을 돕는 법제도 정비 등 제시

<표 7> 미래전망, 중장기전략, 정책 도출 전문가 그룹

분야	집필자(소속)
관계	이상직(국회미래연구원)
환경	조만석(국토연구원), 박성원(국회미래연구원, 연구책임)
교육	여영준(국회미래연구원), 김유빈(명지대),
경제	유희수(국회미래연구원), 정혜윤(국회미래연구원)
정치	박현석(국회미래연구원), 박상훈(국회미래연구원)
국제	차정미(국회미래연구원), 김태경(국회미래연구원)

<표 8> 6대 분야별 미래 변화 동인과 집필에 참여한 전문가 그룹

분야	변화의 동인들	집필자
관계	사회적 관계의 질, 사회적 고립, 여성경력단절, 장애인 고용률, 청년 고용	박상언(충북대), 김성아(한국보건사회연), 심지현(숙명여대), 김정현(한국산업인력공단), 김유빈(한국노동연)
환경	주거 수준, 지역별 기후변화 적응, 1인당 도시공원면적, 범죄율, 교통환경	강미나(국토연), 심창섭(한국환경연), 이후승(한국환경연), 오경석(치안정책연구소), 이재호(SF소설가)
교육	사회이동성, 평생학습, 임금불평등, 하도급 거래관행, 지역별 창업잠재력	이두희(서울대), 고영삼(동명대),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위평량(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강경균(한국청소년정책연)
경제	경제성장, 신생기업 생존율, 산업별/기업별/지역별 연구개발비, 4차산업혁명과 재택근무	이연호(연세대), 박총렬(국회입법조사처), 정민우(KISTEP), 김지현(연세대)
정치	신뢰도(정부, 국회, 시민단체), 정부효과성, 지방정부 갈등관리 역량, 지자체 재정자립도, 정당가입률, 공공기관 청렴도,	주성수(한양대), 김현정(고려대), 이선우(한국방송통신대), 배기수(충북대), 김진주(명지대), 김경용(국민권익위)
국제	미중 갈등, 북한 핵무기와 군사력, 남북교역 및 북중교역, 한국과 유럽 관계, 한국과 아프리카	전재성(서울대), 부형욱(한국국방연), 임수호(국가안보전략연), 오창룡(국회입법조사처), 조원빈(성균관대)

참고문헌

-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2021).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국회미래연구원
- 국토교통부. (2021). 2020년 주거실태 현황.
- 김성아. (2022). 사회적 고립. 국회미래연구원 제출 자료.
- 박성원 외. (2022). 대한민국 미래전망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 정민우. (2022). 기업별, 산업별, 지역별 연구개발비 추이. 국회미래연구원 제출 자료.
- 위평량. (2022). 하도급 거래관행. 국회미래연구원 제출 자료.
- 행정안전부. (2022). e-누리지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수.

국가미래전략 Insight 발간현황

vol	제목	작성자	발행일
1	2050년 대한민국 미래예측과 국회가 주목한 11대 국가 개혁과제	김유빈(연구지원실장)	2020.8.20.
2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박성원(혁신성장그룹장)	2020.9.3.
3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	김홍범(국회미래연구원 전 연구위원)	2020.9.17.
4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박상훈(거버넌스그룹장)	2020.10.15.
5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장)	2020.11.12.
6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	박성원(혁신성장그룹장) 정영훈(국회미래연구원 전 연구위원)	2020.11.19.
7	기후변화 영향 대응현황 및 제언 (국내 연구·정책에 대한 양적비교를 중심으로)	김은아(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0.11.26.
8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0.12.10.
9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 변화	박성원(혁신성장그룹장) 김유빈(연구지원실장)	2020.12.24.
10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민보경(삶의질그룹장)	2021.1.7.
11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진단 및 교육정책 과제	성문주(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1.21.
12	코로나19와 함께 한 1년: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허종호(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2.18.
13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양상과 무역분쟁: GDEL트를 중심으로	박성준(거버넌스그룹 부연구위원)	2021.3.4.
14	국내외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정훈(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2021.3.18.
15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4.1.
16	국가장기발전전략 탐색에 따른 개혁의제 제언	이선화(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	2021.4.15.
17	행복조사의 필요성과 한국인의 행복 실태	허종호(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4.29.
18	일하는 국회의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	조인영(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5.13.
19	인구감소시대의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탐색	이채정(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5.27.
20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장)	2021.6.10.
21	선호미래로 향하는 우회도로	박성원(혁신성장그룹장)	2021.6.24.
22	높은 자살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자살률	박상훈(거버넌스그룹장) 외 4인	2021.7.8.
23	대량 문헌탐색 기반 이머징 이슈 도출 :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분석 사례	김유빈(연구지원실장)	2021.7.22.
24	재난을 넘어, 혁신을 넘어: 미래를 위한 혁신 정책의 대전환	전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8.5.
25	어디 사는지에 따라 행복감이 달라질까? 도시와 비도시 지역의 행복요인	민보경(삶의질그룹장)	2021.8.19.
26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정책 주요 이슈와 제언	성문주(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9.3.
27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조해인(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정훈(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2021.9.16.
28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바라보는 미래 정책과 국회	박현석(거버넌스그룹장)	2021.10.7.
29	디지털화폐의 등장과 금융시스템의 변화 전망	박성준(거버넌스그룹 부연구위원)	2021.10.21.
30	에너지수요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조해인(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11.4.

vol	제목	작성자	발행일
31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편 전략	이선화(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	2021.11.18.
32	청년층의 기업가정신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방향 탐색	성문주(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12.9.
33	저출생·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검토 : 아동 및 노인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 시설의 분포 분석을 중심으로	이채정(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12.16.
34	인구충격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 : 완화와 적응	민보경(삶의질그룹장)	2021.12.23.
35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대응 산업지원 정책과제와 정책효과 분석	정훈(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12.30.
36	미래비전 2037 -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	김유빈(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2022.1.10.
37	장애인 운동 20년, 장애 입법 20년 : '이동권'에서 '탈시설'로	이상직(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2.1.24.
38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주요 결과	허종호(삶의질데이터센터장)	2022.2.7.
39	대한민국의 미래와 교육 : 교육아젠다 10선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장)	2022.2.21.
40	타협의 정치와 갈등 관리 : 한국 법인세율 결정과정 분석	박현석(거버넌스그룹장)	2022.3.7.
41	코로나19 이후 미국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시사점	이선화(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	2022.3.21.
42	디지털전환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사회의 중장기 변화 전망과 시사점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2.4.4.
43	기후변화 5대 영향 영역과 적응입법 아젠더	김은아(혁신성장그룹장)	2022.4.18.
44	'국가'와 '국민'을 줄여 써야 할 국회	박상훈(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 문지혜(거버넌스그룹 연구행정원) 황희정(혁신성장그룹 연구행정원)	2022.5.2.
45	미래 전망의 프레임과 개선안	박성원(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2022.5.16.
46	노동시장 취약계층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제언	성문주(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2.5.30.
47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 분석 : 소득 수준과 빈곤 경험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이채정(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2.6.13.
48	1인 가구의 행복 분석	민보경(삶의질그룹장)	2022.7.11.
49	한국 복지체제의 대안적 전략 구상	이선화(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	2022.7.25.
50	한국인의 분배 인식 : '능력주의' 논의에 대한 시사점	이상직(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2.8.8.
51	국내 탈석탄 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와 이해관계자 분석	정훈(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2022.8.22.
52	미래 인구구조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	유희수(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지원실장) 우해봉(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	2022.9.5.
53	이머징 이슈 탐색 플랫폼의 이해와 활용	김유빈(前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2022.9.19.
54	대통령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박상훈(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	2022.10.17.
55	일본의 정년정책 : 한국과 비교의 관점에서	정혜윤(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2.10.24.
56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정책과 회복탄력적 혁신전략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2.10.31.
57	탈석탄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시사점 : 노동자 및 지역주민 대상	정훈(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2022.11.14.
58	청년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디로 이동하는가?	민보경(삶의질그룹장)	2022.11.28.
59	인재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방향 : 학습지원 방향 및 진단지표 개발	성문주(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2.12.12.
60	'양극화' 문제에 대한 국회의 대응	박현석(거버넌스그룹장)	2023.1.2.
61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	국회미래연구원	2023.1.9.

- 이 자료는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nafi.re.kr) 및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